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8월 3일
ISSN 1976-0507 Vol. 3 No. 32

글로벌 경제위기와 MDG 이행현황

정 지 선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 전문연구원 (jsjeong@kiep.go.kr, Tel: 3460-1078)

- ▣ 2015년까지 세계 빈곤퇴치를 목표로 2000년에 제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개도국의 수출, FDI, 해외송금 감소가 사회취약계층의 고용, 보건, 교육, 영양 등 제반 상황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 UN은 지난 7월 6일 『2009년 MDG 이행성과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절대빈곤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 2009년 한 해 동안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인구가 경제위기 이전 예측했던 것보다 약 5,500만~ 9,0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 국제사회는 개도국 내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국의 사회보장, 무역증진과 식량위기 타파를 위한 기금 마련 등 다양한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지만 기존 원조 확대 계획이 GNI에 대한 ODA 비율 기준이어서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원조 절대액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 2010년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 역시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임.

 - 빈곤퇴치,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의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체계적인 다자원조전략을 마련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아시아의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서론

- 2008년 말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개도국으로 확산되어 그동안 국제사회가 이룩한 빈곤퇴치의 성과가 위협받고 있음.
 - 선진국에 비해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어려움이 더 심화되고 있음.
 - 특히 개도국 내 빈곤층의 경우, 2008년 상반기 발생한 식량가 상승의 여파로 여전히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음.
-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개도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공조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지난 5월의 G20 정상회담과 7월의 G8 정상회담에서 개도국의 재정난과 식량위기 타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국제공조 노력이 있었음.
 - 5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고위급회담에서는 공여국들의 원조확대의지를 재확인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기도 함.
- 최근 UN이 발표한 『2009 MDG 이행성과 보고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MDG 이행이 위협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음.
 - 2005년 UN은 전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 기아, 보건,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DG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있음.
 -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인해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며 감소 추세였던 절대빈곤인구 역시 2008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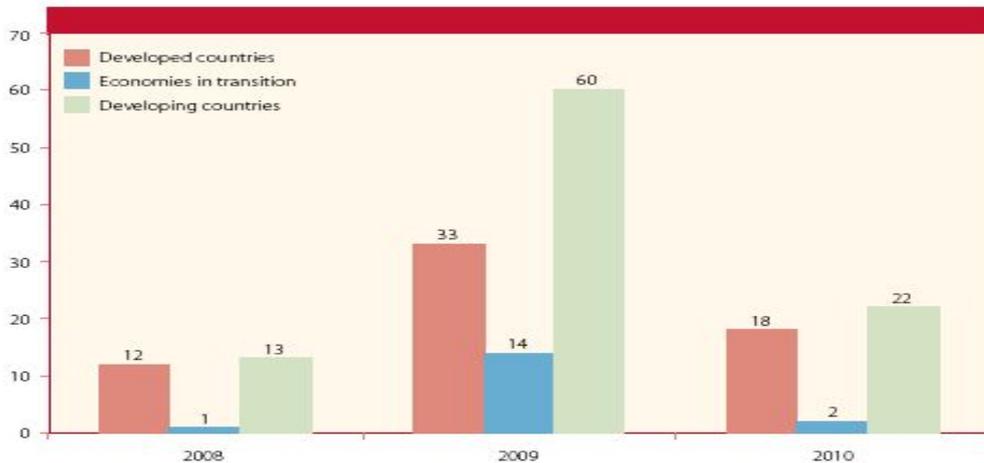
2. 경제위기가 개도국 경제에 미친 영향

-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난도 가중되고 있음.
 - UN의 2009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는 개도국 중 7개국만이 빈곤 감소에 필요한 최소선인 1인당 GDP 증가율 3%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개도국 중 1인당 GDP가 감소하는 국가는 2008년 13개국에서 2009년 60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1인당 GDP 감소 추세를 보이는 국가 수

(단위: 개)



자료: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9*(Update as of mid-2009).

-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원자재 수요의 감소로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세계은행은 2009년 『경제위기에 따른 개도국 피해 보고서』에서 저소득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피해는 적지만 기타 경로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힘.
 - 저소득국은 석유, 커피, 목화, 광물 등 원자재 수출을 통한 수입이 정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많은 해외투자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취소 및 연기됨.
- 국제금융시장의 침체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선진국 소비 감소로 수출 역시 대폭 줄어들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8년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이 2007년의 1/2 수준인 약 4,670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약 1,650억 달러 추가로 감소할 것임.
 - 선진국 소비시장 위축으로 선진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고 있음.

- [표 1]에 따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08년 말 전년대비 11.5%가 감소였고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경우 17.7%가 감소함.

표 1. 개도국으로부터 미국 수입규모(2008년 1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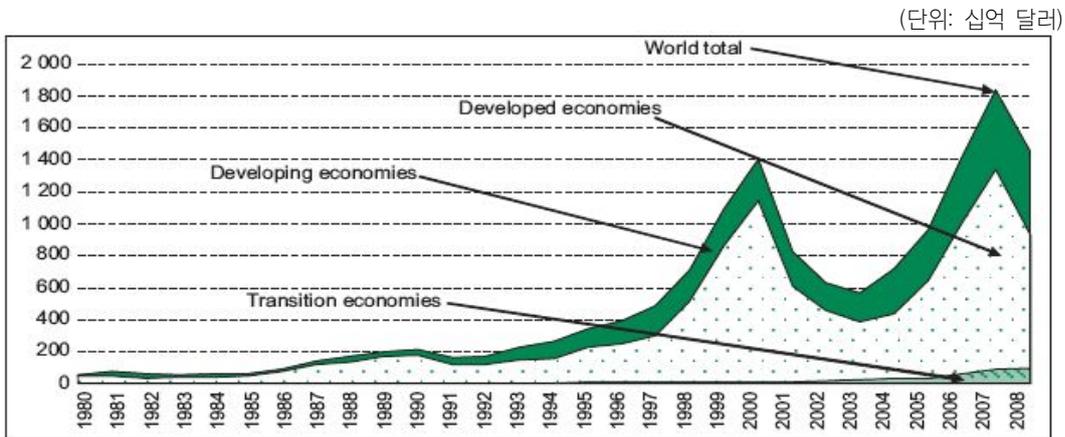
구분	수입규모 (십억 달러)	전년대비 변화율 (%)
모든 개도국	170.8	-3.2
중소득국	155.0	-2.9
저소득국	15.8	-5.8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1.4	-11.5
- 동아시아	2.4	13.4
- 동유럽, 중앙아시아	0.1	-17.7
- 중남미	1.1	-2.4
- 중동, 북아프리카	0.0	38.2
- 남아시아	0.8	11.6

자료: 미 상무부; 세계은행.

- UNCTAD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2009년 개도국으로의 FDI 유입 규모 역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그림 2]에 따르면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FDI 유입이 2008년에는 개도국, 선진국 모두에서 감소 추세였음.

그림 2. FDI 유입규모 변화(1980~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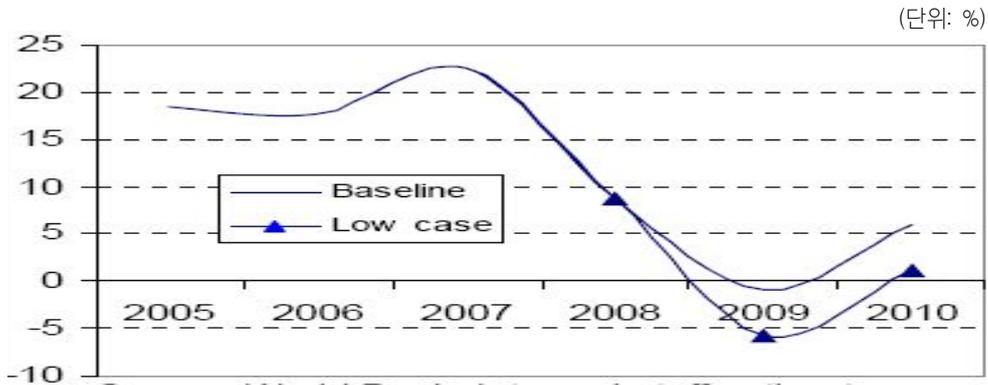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09-2011.

- 개도국의 경제난 심화는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여성, 빈곤층의 실업 증대와 소득 감소로 이어짐.
- 수출위주 산업의 침체로 공장에 고용되었던 노동자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나고 있음.
- 캄보디아의 경우, 의류산업 고용노동자 중 10%에 달하는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음.

- 노동자들이 개도국 성장의 동력이었던 수출위주 산업에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로 이동함에 따라 빈곤퇴치의 이행 역시 난항을 겪음.
- 해외송금의 감소, 임금 삭감과 실업의 증대는 빈곤층의 가계 부담을 심화시켜 아동 교육, 보건, 영양 등 인간개발 관련 지수의 악화를 불러오고 있음.
- 빈곤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액(remittance)이 200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함.
-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며, 심지어 식량부족으로 영양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그림 3. 개도국으로의 해외송금액 변화



자료: 세계은행

3. 경제위기와 MDG 이행 현황

가. 절대빈곤퇴치와 기아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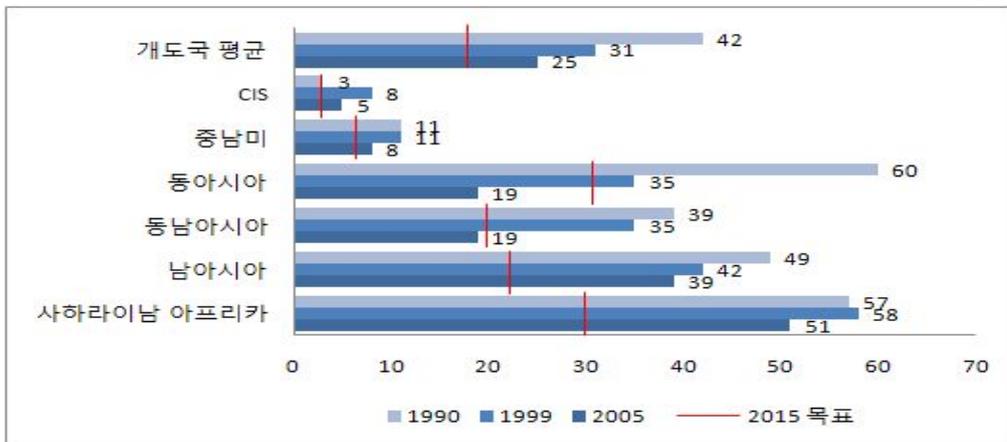
- 『2009년 MDG 이행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위기 여파로 2015년까지 절대빈곤인구를 반감하기 위한 MDG 이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009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인구가 약 5,500만~9,0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¹⁾

1) 세계은행은 1999년부터 절대빈곤층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로 규정하였으나 2008년 말, PPP기준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로 새로이 규정함.

- 절대빈곤인구는 1990년 18억 명에서 2005년 14억 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하였음.
- 특히 최빈국에서는 1.25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소득으로 생계를 지속하던 사회취약층이 경제난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절대빈곤인구에 대거 편입됨.
-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빈곤상황이 심각한 반면, 동아시아 지역의 빈곤인구는 대폭 감소하여 2015년 목표를 이미 달성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높은 인구증가율로 1990년에 비해 2005년 약 1억 명 정도 절대빈곤인구가 추가되었음.
- [그림 4]에 따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전체 인구 중 절대빈곤인구 비율은 51%로 2015년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임.
- 동아시아의 우수한 빈곤퇴치 성과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빈곤인구 감소에 크게 기인함.

그림 4. 절대빈곤인구의 지역별 변화

(단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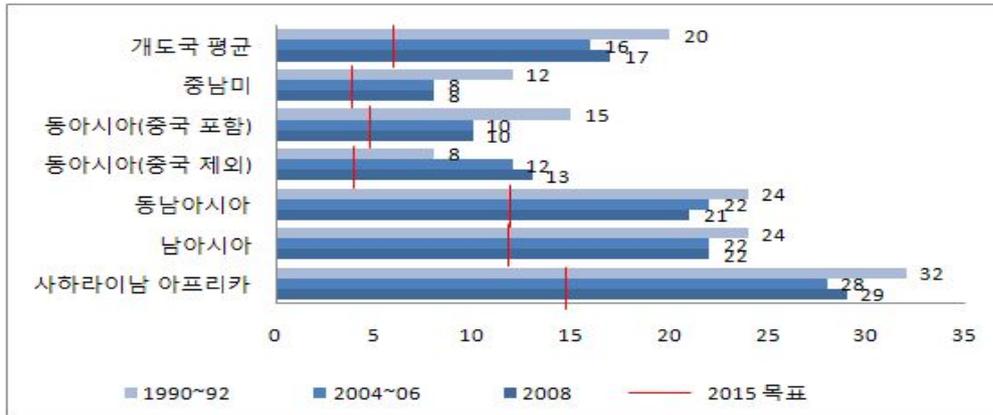
주: 해당지역 인구 중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인구 비율.
 자료: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Report 2009*.

- 2008년 상반기 급격한 식량가격 상승으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전체 기아인구를 반감하고자 하는 목표가 난항을 겪고 있음.²⁾
-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식량부족으로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양실조로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2) 기아퇴치 목표를 위한 기아인구 측정의 주요 지표는 전체인구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의 비율임.

그림 5. 지역별 영양실조 인구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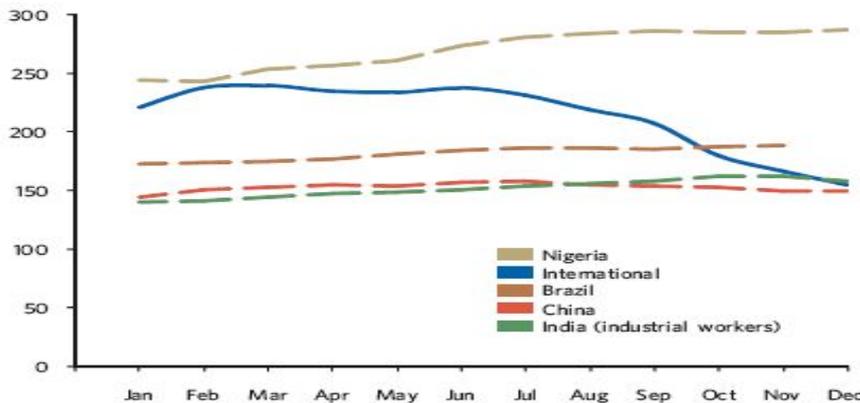
(단위: 비중 %)



자료: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Report 2009.

- 2008년 초 상승하였던 국제식량가는 2008년 하반기에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많은 개도국에서 현지 식량가는 여전히 상승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08년 식량가가 안정되면서 개도국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림 6]에서와 같이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높은 식량가격이 유지됨.
-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성 확대, 빈곤층을 위한 사회지원정책이 필요함.

그림 6. 국제식량지표 및 국별 소비자식량가 지표(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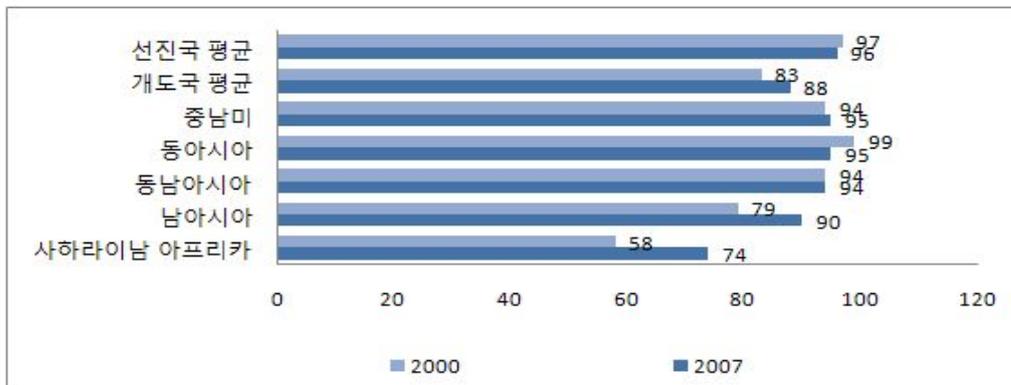
주: 2000년 가격(100)을 기준으로 2008년 가격변화
 자료: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Report 2009.

- 2008년 전반기의 에너지·생필품 가격의 상승과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는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절대빈곤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노동인구 중 하루 1.25달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인구가 200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08년부터 증가하거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것임.
- ILO는 최악의 경우, 개도국 노동인구 중 절대빈곤 노동인구가 2007년 24%에서 2008년 28% 수준으로 증가하리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전체 노동인구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 노동자이며 3/4 이상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조건하에 고용되어 있음.

그림 7. 지역별 하루 1.25달러 미만 소득의 절대빈곤 노동자율 변화

(단위: 비중 %)



자료: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Repor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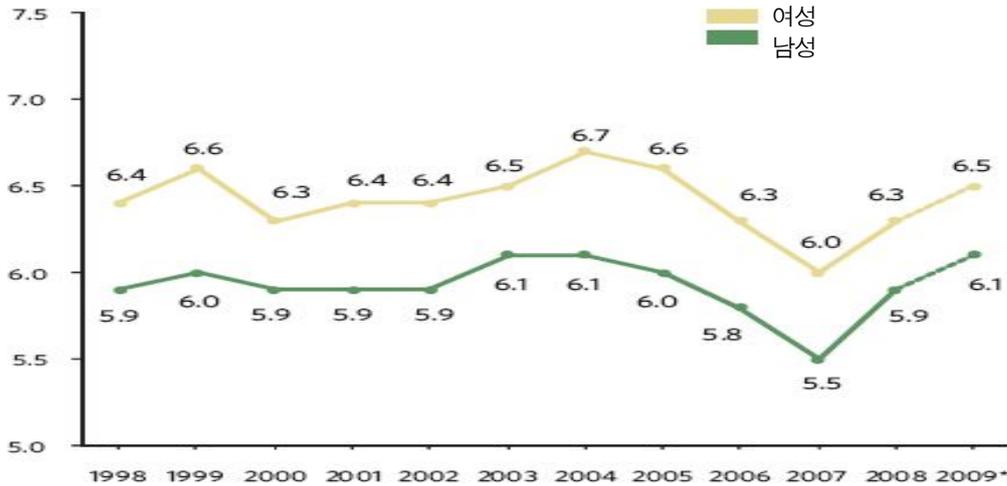
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역량 강화

- 경기침체로 개도국 내 실업이 늘어나면서 특히 여성노동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여성 실업률 확대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MDG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여성의 경우, 무급으로 가족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잃더라도 사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고용형태가 많음.
- 경기침체 초기에는 남성이 더 많이 일자리를 잃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이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ILO에 따르면, 2008년 12월 전년대비 남성은 12.8%, 여성은 6.7%의 실업률 증가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남성 실업률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반면 여성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 이는 전통적인 남성 위주 산업구조에서 경제위기 초기에는 남성이 먼저 실업의 충격을 받지만 뒤늦게 여성노동자가 많이 고용된 분야에까지 영향이 미치며 장기적으로 여성 피해가 커지기 때문으로 추정됨.

그림 8. 세계 실업률 변화: 남녀비교(1998~2008년)

(단위: %)



주: 2009년의 경우 ILO 가상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잠정치.
 자료: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Report 2009*.

- 교육부문에서도 남녀간 격차가 심각하여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로 측정되는 양성평등률은 2007년 기준 개도국 내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5명이었음.
- 남녀 취학률의 차이는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농촌지역과 빈곤층의 경우, 격차가 보다 벌어지는 양상을 보임.
- 경제난으로 가계소득이 줄며 자녀 중 아들만을 학교에 보내는 빈곤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남녀간 교육 불평등의 심화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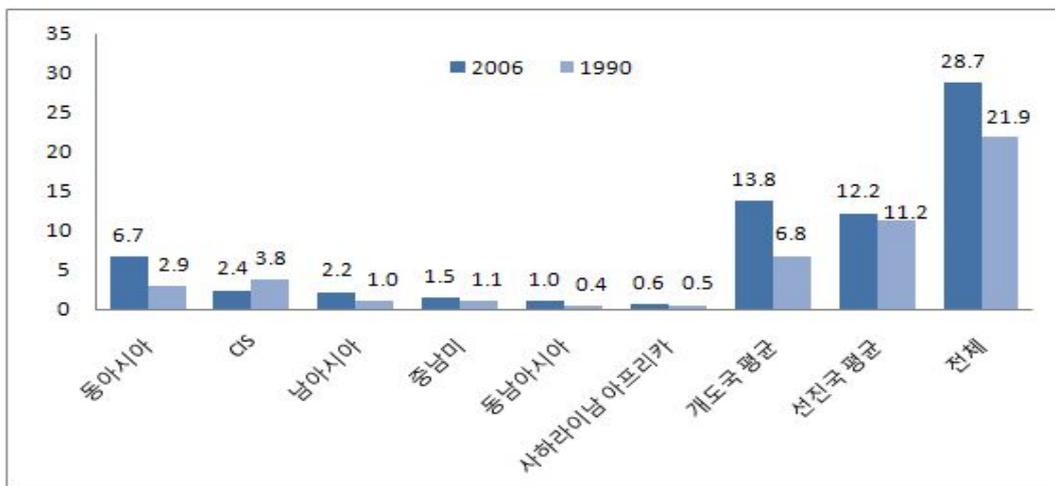
다. 환경 지속가능성 강화

- 2006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9억 톤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1990년 수준에 비해서는 31%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2톤으로 선진국에서 가장 심각하였고 개도국은 3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0.8톤을 기록함.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심화는 각종 기상이변과 생태계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 어업 등 빈곤층의 주된 생계 수단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 UN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전격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임.

그림 9.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단위: 십억 톤)



자료: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Repor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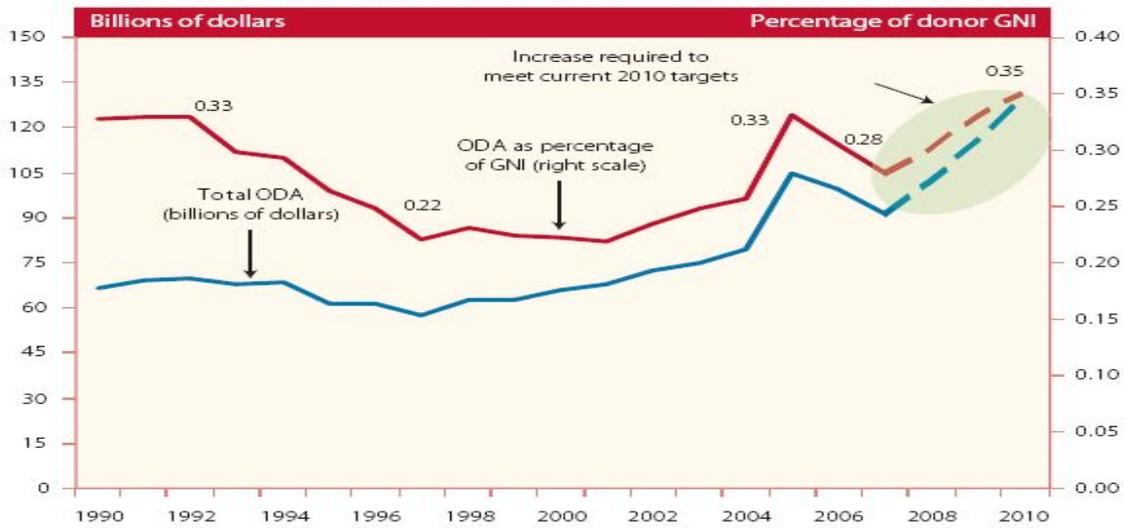
-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보존과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막화 방지 역시 아직 미진한 상황임.
- 지표면 중 보호지역의 비율은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008년 지표면 중 13%만이 보호지역으로 나타남.
- 지표면에서 사막화(deforestation) 지역은 매년 1,300헥타르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특히 심각함.
- 2004년 인간이 방출하는 온실가스 중 17.4%가 주로 개도국 내 사막화와 삼림훼손에서 기인함.

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의 부채탕감과 수출 확대로 외채상환능력이 개선되었던 개도국

- 정부의 재정 상황이 경제위기로 다시 악화되고 있음.
- 2005년 파리클럽의 고채무빈곤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에 대한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로 많은 개도국의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음.
 - 개도국 수출규모가 2003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며 2000년 수출로 인한 수입 중 13%를 차지했던 외채상환부담률이 2007년에는 4%로 하락함.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개도국의 외채상환부담률 역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기로 한 공여국들의 공약 준수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어야 함.
-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감소, 해외송금 감소로 민간자본 유입이 줄어들며 개도국 정부가 교육, 보건, 민간부문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부족이 심화됨.
 - 개도국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ODA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 2008년 ODA 공여액은 전년대비 10.2% 증가한 1,198억 달러로 양적으로 역사 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공여국 들은 ODA 확대 공약 준수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 GNI에 대한 ODA 비율은 평균 0.3%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만이 UN의 목표인 0.7%를 달성함.
- 그러나 대부분 공여국의 원조확대 계획이 GNI에 대한 ODA 비율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규모 축소와 함께 ODA 절대액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 G8 정상회담에서 주요 공여국들은 원조규모를 2004년 800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 1,3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공여국별 원조예산계획에 따르면 2008~10년간 원조예산을 11% 정도 확대하기로 함.
 - 그러나 경제규모 축소로 인해, 초기 설정한 규모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보다 100억~150억 달러 정도가 추가되어야 함.
 - 특히 아프리카 원조를 2010년까지 2배로 증액하기로 하여 2008년 전년대비 약 10.6%가 확대되었으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그림 10. OECD/DAC 회원국 원조규모 변화확대율



주: 우측 동그라미 표시부분은 2010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액 증가율.
 자료: OECD/DAC; 세계은행.

4.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 경제위기로 가중되는 빈곤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MDG 이행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 공여국 모두의 공조 노력이 필요함.
 - 개도국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호와 고용기회 확대,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호는 소득 증대뿐 아니라 영양, 보건, 교육, 에이즈, 여성역량 강화와 아동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M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농업, 어업 등 빈곤층의 주된 생계수단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함.
 - 공여국 측에서는 개도국 정부가 민간자금 유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조확대 공약을 준수해야 함.
-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500억 달러 기금과 최빈국에 대한 60억 달러 양허성 금융지원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 노력이 추진되

있음.

-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국·최빈국의 사회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반영함.
- 아울러 MDG 달성 공약과 무역을 위한 지원, 기존 ODA 확대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ODA 역할이 강조되면서 2009년 5월 OECD/DAC 고위급회의에서도 원조확대 의지가 재확인됨.
- 선진 공여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확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경제위기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해지며 자국산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타이드 원조(tied aid)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관련 기금,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자금 등 개발을 위한 재원이 다원화되면서 ODA와 이들 간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함.
- 2009년 7월 아킬라 G8 정상회담에서는 개도국 농업개발을 위해 향후 3년간 120억 달러를 지원하는 식량안보기금을 마련함.
- 경제위기와 식량난으로 기아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G8 정상회담의 식량안보 이니셔티브는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지난 20여 년간 개도국 농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된 식량원조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역량개발과 농업생산성 확대로 지원 방향이 바뀌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³⁾

5. 정책적 시사점

-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개도국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취약계층의 고용, 소득, 빈곤, 영양, 보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3) 미국 등 선진국의 식량원조는 자국 농산물에 대한 타이드 원조로 거래비용 상승과 원조효과성 저하, 국제농산물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옴.

- 개도국 빈곤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MDG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8년 7억 9,700만 달러의 원조를 공여하여 전년대비 36.8% 증가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0.086%로 DAC 평균 0.3%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 2008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설정한 목표인 “2012년까지 ODA/GNI 비율 0.15%, 2015년 0.25%”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조확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시아의 중견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개도국의 경제위기 타파와 MDG 달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임.
-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원조의 양적 확대, 질적 제고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 모범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가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타 공여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원조효과성을 보다 제고해야 할 것임.⁴⁾
- DAC 가입을 대비하여 원조 언타이드 확대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됨.
- 2007년 한국 원조의 언타이드율은 24.7%로 DAC 평균인 85%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전체 언타이드 원조 비율을 75%,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 기존 관행에 따른 타이드 원조를 통한 민간부문 해외진출 지원이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지속가능성과 기아퇴치를 위해 개별국가 차원의 양자적 접근보다 다자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인 다자원조전략이 부족한 상황임.

4)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 회의에 이어 서울에서 2011년에 제4차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회의(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개최하기로 결정됨.

- 선진공여국의 경우 단일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전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자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다자원조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UN, 다자개발은행, 다자기금에 대한 체계적 자원배분과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개발원조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기술지원은 환경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DG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개도국 농업생산성 확대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과거 경제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함. **KIEP**